

# 너나없이 쏟아내는 감세 정책...성장률 바닥, 곳간 걱정은 뒷전

## 감세 공약 경쟁에...당내에서도 "재정 선택지 사라져" '0%대 성장' 암울한 경제 전망...세수 불확실성 증대

오늘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감세 공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모두 재정 투입과 감세 확대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는 나라 곳간 사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정적자와 미국 상호관세 압박으로 인한 0%대 저성장 전망이라는 험난한 경제 환경 속에서 출범하게 될 차기 정부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감세 공약 경쟁에...당내에서도 "재정 선택지 사라져"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간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을 목표로 감세 정책을 펼쳤으나, 성장률 둔화와 함께 100조원이 넘는 재정 적자를 낳았다. 나라 살림살이를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04조8000억원으로, 국내총

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4.1%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 기간 이후 최대 수준이다.

금리인하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건축과 감세가 경기를 더욱 둔화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87조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구간별로 1%포인트(p) 인하하고,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하는 등 감세 정책을 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공약을 살펴보면, 양측 모두 중산층 감세와 복지 지출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 근로소득세 불가연동제 등을 언급하며 중도보수층을 향한 표심 확보에 나섰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역시 종합소득세에 불가연동제 도입,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세원 확보를 위한 증세 정책을 펼쳤던 정부는 아이러니하게도 보수집권당이었던 박근혜 정부 때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했으나, 이후 담뱃세, 주류세, 주민세 등을 인상하는 증세 정책을 펼쳤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시차를 둔 이러한 증세 효과로 초과세수를 거둬며 코로나 기간 수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현재 대선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감세 정책을 공약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최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여부를 진단하고 차기 정부의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감세 경쟁을 자제하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서한을 보냈다"며 "재정의 선택지가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 감세로 100조의 세수평크가 났다. 차기 정부는 '재정 마이너스 통장'부터 떠안는다"고 지적했다.

### ◆'0%대 성장' 암울한 경기 전망에...세수 불확실성 커져

올해 경기 전망도 비관적이다. 현대경제연구

구원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이전 전망보다 1.0%p 낮춘 0.7%로 전망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인 1.0%보다도 낮은 수치다.

내수 불황이 장기화하고 수출 침체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 0%대 초저성장 탈출이 어렵다는 관측이다. 향후 미국의 상호관세에 따른 우리 경제의 충격은 상당할 거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원이 예상만큼 걷히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경기 전망이 점점 악화하는 가운데 특히 내수 침체로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등 자산 관련 세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세입이 줄고 국제발행이 지속되면 결국 정부의 정책 대응 여력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기업실적 호조에 따른 최근 3월까지 법인세 수급은 양호한 상황이나 올해 기업 실적 전망이 하향조정되면서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은 예상보다 저조할 거라고 정부는 관측하고 있다.

### ◆축소하는 재정정책의 폭...'감세 낙수효과 작동 안 해'

한 달 후 출범할 차기 정부는 0%대 성장률과 미국의 관세리스크 속에서 경제적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단순한 감세 공약을 넘어 현실적인 세원 확보 방안과 투명한 증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감세와 복지 확대라는 달콤한 공약 이면에서는 차기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재정 정책의 폭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셈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건설재정이라는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 재정운용의 목표 자체를 '지속 가능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이 손 묶여 있는 상태에서 재정이 경기의 버팀목이 되려면 출범 직후 최소 2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 누적적·보편적 증세 로드맵을 동시에 제시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는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낙수효과와 이데올로기는 이제 끝내야 한다. 감세로 성장해 세수를 확대한다는 주장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민생을 악화시키는 '역(逆)낙수'가 벌어진다. 다음 정부는 불로소득 환수와 생산적 투자를 촉진하는 동반성장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달 후 출범할 차기 정부는 0%대 성장률과 미국의 관세리스크 속에서 경제적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단순한 감세 공약을 넘어 현실적인 세원 확보 방안과 투명한 증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감세와 복지 확대라는 달콤한 공약 이면에서는 차기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재정 정책의 폭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셈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건설재정이라는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 재정운용의 목표 자체를 '지속 가능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이 손 묶여 있는 상태에서 재정이 경기의 버팀목이 되려면 출범 직후 최소 2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 누적적·보편적 증세 로드맵을 동시에 제시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는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낙수효과와 이데올로기는 이제 끝내야 한다. 감세로 성장해 세수를 확대한다는 주장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민생을 악화시키는 '역(逆)낙수'가 벌어진다. 다음 정부는 불로소득 환수와 생산적 투자를 촉진하는 동반성장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휘발유 값 13주 만에 상승** 국내 주유소 주간 휘발유 평균 가격이 13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첫째 주(4~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1639.8원으로 전주 대비 4.3원 상승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리터당 1506.6원으로 전주 대비 4.2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곡성대표 농특산물 '곡성멜론' 첫 출하



곡성군은 대표 농특산물인 '곡성멜론'이 첫 출하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출하를 시작으로 곡성멜론은 8월까지 본격적인 수확과 판매가 이어질 예정이며, 온·오프라인 등을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도 추진한다.

곡성멜론은 유기물 함량이 풍부한 토양과 일조량, 큰 일교차 등으로 인해 당도와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116ha에서 재배된 멜론은 육묘부터 수확, 선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지난해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 지역에 총 72t이 수출됐다.

곡성·양해영기자

## "차기 대통령에 바란다"...중기 4곳중 3곳은 '이것' 꼽았다

### 중기중앙회, '대통령에 바란다 의견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 4곳 중 3곳은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능력으로 '경제성장 견인능력'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제조업·비제조업) 604 개사를 대상으로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중소기업계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 75.7%가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능력·조건으로 '경제성장 견인능력'을 꼽아, 경제분야에서의 능력을 대통령 자질로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기 대통령이 가져가야 할 국정 방향으로는 '내수활성화와 민생 안정'(48.0%)이 가장 높았으며,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45.7%),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 극복'(36.6%), '기

업혁신과 규제 완화'(24.5%), '수도권과 지역 불균형 완화'(19.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차기 대통령이 중점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과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에서는 '청년고용 지원'(4.07점), ▲성장동력 확보에서는 '금융지원 확대, 벤처투자 활성화'(3.82점), ▲경제생태계 순환에서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특화산업 육성, 인력, 금융지원'(4.08점)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는 '성장'(31.3%), '공정'(24.0%), '일관성'(17.7%), '혁신'(17.5%), '분배'(9.4%) 순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계는 차기 대통령이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로 인해 침체된 경제상황을 빠르게 회복시키기를 바란다"며 "내수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국정 방향으로 정하고 '청년고용 지원'과 '지방 중소기업 특화산업 육성' 등 정책과제가 차기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반영돼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 "저가 커피전문점, 가성비 중시하는 젊은층 중심으로 확대"

### 가성비를 중시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가파른 성장세를 그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의 마크로밀 엠브레인 패널빅데이터 '커피 프랜차이즈 이용' 분석에 따르면, 최근 커피 전문점 시장에서 저가 브랜드로 분류되는 프랜차이즈가 시장 내 입지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저가 브랜드인 M사와 C사는 각각 27%, 26.8%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고급 글로벌 프랜차이즈 S사의 이용자 수는 2023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

저가 브랜드의 성장에는 20대 젊은 층의 증가세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M사의 경우 20대에서 30.3%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C사 역시 20대에서 35.4%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가성 경쟁력을 앞세운 저가 프랜차이즈가 가성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급 브랜드인 S사는 이용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당일 재구매 시 커피 가격을 60% 할인하는 '원 모어 커피', 오후 5시 이후 카페인 프리 음료를 최대 50% 할인하는 '이브닝 이벤트' 등 이른바 '반값 커피' 프로모션을 펼쳤다.

### 고가 브랜드 유지 혹은 소폭 감소 흐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커피 시장은 '가격 경쟁력'과 '경험적 가치'를 모두 만족시키는 이중 전략을 통해 소비자 접점을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엠브레인은 "브랜드 경험이나 매장 특화

서선욱기자